

현장과 시각

비싼 대가 치르는 '예술기업'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해 5월 금남로 거리에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곳곳에서 문화 난장이 펼쳐졌고, 축제는 자정까지 계속됐다.

주최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뽑혀 인건비 등을 지원받던 '사회적 예술기업'(이하 예술기업)이었다. 예술기업은 간병인 등에 국한됐던 사업을 예술인으로 확장시킨 첫 기업이었다고, 이날 축제는 첫 월급을 받은 예술인들이 시민들을 초청한 행사였다.

같은 해 3월 문화재단 '모난돌'이 중심이 된 예술기업이 사업권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놀랐었다. 벤치마킹 대상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와 발품만으로 정부로부터 95명분의 지원금을 받아 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대 속에 출발했던 예술기업이 요즘 경황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이고, 기업 대표는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자가 짧은 문화 계열과 '모난돌'을 만난 건 아주 오래전이었다. 건강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이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예술기업이 출범했을 때 모난돌의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얻게 된 문화예술인들의 실험력이 결합하면 관 주도의 천편일률적 이벤트, 지원금에 의지한 단체들의 연례행사와는 분명 다른 문화적 기운이 넘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취재하면서 다소 걱정된 건 두 가지였다. 바로 돈과 사람. 정에 요원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협찬을 받아 사업을 꾸리는 것과 수익원의 '돈', 100명 가까운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돈' 관련 사건이 터졌고, 높은 이직률 등을 볼 때 직원들간의 소통도 성공하진 못한 것 같다.

예초 경험이 전혀 없는 자유분방한 예술인들이 '회사'를 만들고 또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건 어려운 과제였다. 어쩌면 역할 모델 하나 없이 '맨땅'에서 시작한 1년차 신생 기업은 현재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의 문제점을 포함, 지난 1년의 공과(功過)를 냉정히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수업료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오는 26일 광주 지산동 허름한 창고에서는 조출한 집들이가 열린다. 예술기업 소속 미술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발신할 아지트를 마련하고 첫 발을 떼는 자리다. 작가들은 이곳을 작업장 겸 전시장으로도 활용하고, 지산동을 '예술의 거리'로 변신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주춤거리고 있는 예술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mekim@kwangju.co.kr

金통일 '6·15 메시지' 어떤 내용 담길까

남북관계 새 제안 없이 원론적 언급에 그칠 듯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키로 함에 따라 김 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측 행사 참석자 중 최고위 인사로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6·15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 기대적인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6·15 및 10·4선언과 관련, 이의 이행을 절대시하는 북한과는 달리 '전면 계승하되 부정하지도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발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전망에 비춰보면 김 장관은 일단 6·15, 10·4 선언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두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 등 과거 이뤄진 남북간의 합의 중 이행 안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안된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 장관의 발언 속에 유사한 톤으로 재차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을 도출한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의 성과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소개하는 내용도 장관의 발언에 담길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 만큼 그런 기초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 얘기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김 장관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남북 당국간 대화복원 등 현안과 관련, 과감한 대북 제안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할 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대북 옥수수 지원 접촉을 제안한 것을 필두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다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은 우세하다.

따라서 김 장관이 새로운 제안을 하기 보다는 남북관계가 상생·공영의 틀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원칙적인 선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연합뉴스

"광우병 전수조사 허용해야 한국과 쇠고기 마찰 해소"

美소비자연맹 허용 촉구

미국 소비자연맹은 10일(현지 시각)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이를 허용해야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막고 '검사합격'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미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같이 촉구했다.

따라서 미 농무부는 "반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인 광우병 자체 조사 금지를 철폐하고 '검사 합격'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같은 광우병 검사를 허용하면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농무부는 모든 식용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일본과 달리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도 농무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캔자스주의 크리스토프 팜스는 이 같은 규제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막고 있다며, 자체 광우병 검사를 통해 '검사합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연색호 방류 중국 쓰촨성 인근 베이촨시 주민들이 11일 지진으로 인해 생긴 연색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연색호 붕괴위험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北 테러반대 성명 전향적 조치"

일인 납치 문제 등 해결 촉구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북한 외무성이 테러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미국은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성명은 성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한 나라가 성명을 통해 정책을 밝힌 것

이므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테러반대 선언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일 뿐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07년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 발표한 '10.3 공동선언' 내용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핵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좋은 신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서 "북한이 곧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이며 빠른 때를 바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다시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前회장 13년만에 법정

오늘 '삼성사건' 관련 8명 첫 공판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의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이 13년만에 법정에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을 직접 겨냥한 여러 의혹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그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서 선 적이 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할값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는 모두절차가 진행될 뒤 진술 형태가 아닌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정몽헌회장이 정상회담 제의"

박지원 의원 '6·15 연석회의' 특강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박지원 의원이 11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당시의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무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대 6·15 연석회의' 초청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2000년 초 당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정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고, 현대가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며 뒷얘기를 풀어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DJ가 관심을 표명하자 박 의원은 정 회장에게 전화해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 회장은 이후 3월 싱가포르에서 남북 특사였던 박 의원과 송호경 북측 특사간 비밀회담이 열렸을 당시에도 회담 장소 등에 대한 양측 간 연락 채널 역할을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DJ와의 차별화를 위해 응졸한 정치적 계산을 했으며 DJ에게 정치적 타격을 줬다는 음모에서 정치적 관계를 조작했다는 믿음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보람상조' (Boram Sangjo)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insurance and family support.

Advertisement for '전남고시학원' (Jeonnam Gosihakwon)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